

北韓의 經濟體制와 經濟展望*

李 泰 旭

I. 序 言

III. 北韓의 經濟體制

II. 社會主義 經濟體制와 改革

IV. 北韓經濟의 展望

I. 序 言

2次大戰 이후 소련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식 古典型 社會主義 統濟體制를 받아들였다. 고전형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전면적 國公有化와 자원배분의 종국적 결정권을 黨指導部에 두는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이다. 그런데 이 체제의 제도적 결함과 비능률성을 인식하고 50年代 後半부터 개혁논의가 시작되어 개혁이 시도되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소련 내에서도 일어나 1962년 리베르만(Liberman)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50년대 이후부터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등 東歐 諸國에서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이 체제에 수정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현재에는 상당히 진행되어 온 상태에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社會主義 世界에서 정치적, 군사적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에서까지 개방과 함께 경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북한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도 2次大戰 이후 소련의 점령과 함

* 本 研究는 1988年度 文敎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게 시작하였으며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모방하면서 이룩하였다. 당시 權力者로 나타난 金日成은 40年이 넘는 현재에도 계속 절대권력을 쥐고 북한을 지배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는데 반하여, 북한은 개인의 오랜 집권에 따른 체제의 경직성과 함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기회가 많지 아니했다는 점이 현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다소 강악을 달리 하지만 계속 개혁운동이 오랜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이유와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개혁과 개방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면서 현재 북한이 유지하는 경제체제 내지 경제운동 노선에 따른 미래의 경제전망을 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社會主義 經濟體制와 改革

經濟體制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는 두가지 기준을 들 수 있다. 첫째 기준은 生産手段의 所有形態이며, 둘째는 資源配分의 방법이다.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있어서 私有財產權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자본주의라 하며, 생산수단을 國有 내지 公有형태가 지배적인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자원배분이 市場 또는 價格機構에 의하여 個個 經濟單位의 물질적 동기에 의해 分權的 意思決定으로 이루어지는 市場經濟體制와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命令 또는 行政指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命令經濟 또는 計劃經濟體制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分權的인 市場機構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自由市場經濟體制(또는 自由資本主義)라고 불리우며,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기구에 따른 자원배분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이를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분권적인 시장기구를 사회주의 체제에 도입한 것을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라고 불리우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戰時的 非常經濟體制 또는 히틀러의 “나찌” 경제체제가 바로 이것이다.

현실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社會制度로서 經濟體制는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大分할 수 있으나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할때 그 유형의 대표적인 형태가 1930年代 소련의 스탈린시대의 경제체제로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y) 또는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classical socialist economy)를 말한다.¹⁾ 이같은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형태는 2차대전 이후 정치적으로 共產化된 東歐諸國과 中國, 北韓, 越盟 등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體制가 改革을 통하여 내용에 수정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 기본 형태이었음은 틀림없다.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는 생산수단이 전면적으로 國公有化되어 모든 산업이 國有國營의 형태를 취하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농업은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그리고 자원배분의 궁극적 결정권은 黨指導部가 쥐고 있으며 政經一致란 특징을 갖고 있다. 경제계획은 계획당국(國家計劃委員會)에서 작성하나 계획의 기본방향과 노선은 黨의 政治局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價格制度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自由價格制度²⁾도 있지만 公定價格制度가 절대적으로 시행되어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균형시키는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시키지 못한다. 계획목표를 수량으로 결정하므로 가격과 가치란 것은 회계상의 기능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1) Janos Kornai (1986), p. 1691.

2) 例로서 집단농장의 주택부속지의 自營農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판매 경우.

이같은 體制를 經濟發展過程의 한 模型으로 본다면 否定的인 측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肯定的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 측면이란 後進 소련을 짧은 기간에 강대국으로 변모케 했다는 점에서는 큰 논쟁이 있을 수 없다. 후진국으로서 자본축적이 부족하고 자질높은 인력자원이 없어 실업자가 많은 나라로서는 중앙계획에 의한 강제저축을 통한 자본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2차대전 후 많은 후진국이 이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문제점은 경제계획지표가 중앙당국으로부터 하부조직인 공장기업체 또는 집단농장으로 하달되어 모든 세부지시를 받는데, 이러한 경제 운용의 경직성 뿐아니라 정보의 불완전성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企業所의 책임자의 경영 능력은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기업소의 생산능력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능력을 낮게 보고를 한다. 또한 생산에 차질을 없애기 위하여 원자재를 과대 보유하려고 함으로서 과잉 재고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생산량 목표만을 고려함으로써 소비자 취향 또는 생산품의 質的 向上에 대한 무관심, 연구개발에 소홀히 하고 그리고 指標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차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같은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경제개발 초기에는 크게 대두되지 않지만 산업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부문간의 불균형과 마찰이 심각히 나타난다. 그리고 자원의 낭비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둔화를 가져오며,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택하는 자원의 量的 動員(mobilization)에 의한 量的 生産擴大만을 중시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 제고를 무시하고 새로운 기술과 자본에 재투자를 소홀히 하는 점이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 또한 정책노선이 상품생산을 부정함으로써 제안된 「一國社會主義論」에 입각하여 자급자족 경제구축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와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중

공업 우선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의 불균형문제도 심각히 대두된다.

중앙집권화된 계획경제에서 이같이 市場的 要因을 제거하고 물량으로 표시된 직접적 자원배분을 하는 의사결정이 중앙으로 더욱 집중화 될수록 사회주의 계획에서 進一步하였다고 생각했었다. 초기의 소련과 동구권 국가 모두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소련에서도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문제점을 인정하였으며, 이것의 실증이 1962년 9월 9일자 「프라우다」紙에 새로운 사회주의 운영방식에 대한 論文을 리베르만(J. Liberman)이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계획의 효율성 제고만을 논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중앙계획 당국의 절대적 권한과 黨의 이익이 모든 경제단위의 개별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스카·랑게(Oscar Lange)는 1936년 소련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이룩하고 있을 때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 모형을 발전시키고 있었다.³⁾ 이 시장사회주의 논의가 1958년에 다시 대두되었지만 보수세력으로부터 크게 반발을 받았는데, 그러나 소련 내에서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에는 이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⁴⁾

改革에 대한 論議는 먼저 東獨에서 시작하였다. 東獨은 당시 經濟相互援助會議(CMEA)에서는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로서 스탈린식 경제체제에 따른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련이 1965년, 체코가 1966~1968, 불가리아가 1965년, 루마니아는 1967년, 폴란드와 헝가리는 1968년에 개혁을 추진하였다.⁵⁾ 이같은 東歐諸國의 개혁은 내

3) J. Kornai (1986), pp.1725~1728.

O. Lange (1936~1937).

4) W. Gumpel (1986), pp.124~125.

5) W. Gumpel (1986), p.125.

용과 시기에 있어서 다소 달리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은大同小異한 것으로 중앙권한을 분권화하며, 계획수립과정을 단순화하고,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지표를 줄이고 창의성과 자주성을 높이며, 그리고 경제를 좀더 경직적인 것으로부터 유연성을 제고시킨다는 내용들이다.

이같은 경제개혁은 단 한번에 모두 끝난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계속되어 왔는 것도 아니다. 60年代에 개혁이 시도된 이후 헝가리 만을 제외하고는 중단되었다.⁶⁾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개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하나의 유형이 1968년 헝가리가 채택한 新經濟體制(New Economic Mechanism 또는 System)를 든다. 헝가리의 신경제체제는 랑게(O. Lange)가 말하는 市場社會主義에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헝가리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코르나이(J. Kornai)는 NEM은 중앙집권적인 경제질서에 시장적 요인이 가미된 혼합체제로서 랑게가 제시한 왈라스(Walras)적인 완전 정보아래 가격기구에 따라 경제주체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市場社會主義體制가 아니라고 했다.

헝가리 改革의 시초는 1954년에 고전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되었지만 1968년을 基點으로 해서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르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친 헝가리의 NEM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⁷⁾ 즉 추진에 있어서 진보와 후퇴가 있었지만 개혁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개혁이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여 주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헝가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다른 하나의 수정형태는 5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유고슬라비아의 勞動者 自主管理企業制度(Worker-managed Socialism)이다. 유고는 2차대전 후 이데올로기 대립보다는 정치적으로

6)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소련으로부터 자주성을 주장하면서 일찌기 다른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이에 대해서는 後述함.

7) Jerzy J. Wiatr (1987), p. 65.

소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전통적 소련식 사회주의 대신 유고적인 사회주의 건설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중앙계획에 따른 경제적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勞動者自主管理制度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유고의 改革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소련 특히 스탈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극이 되었고 그리고 시초가 되었다.

오늘날의 유고식의 사회주의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왔는데, 내용을 보면 소련식 사회주의가 꼭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취하여야 할 형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회주의 국가마다 자기 다른 여건 아래 다른 형태의 제도로 발전시켜야지 관료적으로 왜곡된 소련식 체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경제의 모두를 계획관리 할 필요가 없고 분권화된 제도 아래 의사결정을 하는데 노동자가 생산을 직접 관리하고 자주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사회주의이다. 즉 이 제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나 랑게가 말하는 시장사회주의와는 달리 노동자가 공장 의 근로 조건, 생산과정, 근로시간 등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東歐의 유고나 헝가리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개혁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소련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다른 東歐諸國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시키지 못하였다. 소련이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소련의 승인 없이는 개혁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분권화된 경제체제로 전환이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승인을 해주지 아니했다.

또한 東歐에서 경제개혁을 할 수 있었던 국가는 국내 정치적 분위기에 도 큰 영향을 받았다. 국내 정치가 강압적인 독재국가에서는 경제개혁이 어려웠으며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의 보수세력들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논의나 실제로 개혁을 시도

한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이후이다.⁸⁾ 예를 들면 CMEA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1960年代 중반에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였는데 개혁은 위기 이후에 크게 추진되고, 개혁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경제사정이 다소 좋아지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반대로 경제여건이 나쁜 경우는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中國과 蘇聯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1978년 鄧小平 등장 이전까지는 중앙계획 당국이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물자의 수급균형을 이루는 계획경제체제였다. 특히 제 1차 5개년 계획(1953~1957) 기간 중에는 중앙 집권적 소련식 경제체제를 충실히 운영하였으나 1958년 中·蘇關係 악화와 大躍進運動이 시작되면서 다소 소련식 체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6년 이후 文化革命이 시작된 이후는 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더욱 중앙통제를 가하게 되었고 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이같은 위치에서 1978년에 鄧小平이 이끄는 實用主義者들이 「實事求是」를 주장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과거 경제침체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이리하여 中國은 고전적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서 中國型 計劃商品經濟(a planned commodity economy)⁹⁾를 이룩하였다. 즉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고유한 특징과 장점을 보유하면서 시장경제조직과 운용 가운데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 수정을 추진 중에 있다.¹⁰⁾

소련도 70년대 후반부터 “국가는 무기력해지기 시작했고, 점차 경제적 실패 사례가 나타났다. 어려운 문제들이 누적되어 왜곡되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늘어났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보기 힘든 경제현상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하면서 80년대 초에 이르러 선진국과 비교하여

8) W. Gumpel (1986), p. 126.

9) Zhang Wenwu & Ni Xiaoquan (1988).

10) 金泰弘 (1987), p. 31.

“생산능률, 생산물의 질, 과학적·기술적 발전수준, 선진과학기술 개발과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격차가 더욱 커졌다.”¹¹⁾는 점을 인식하고 고르바초프(Gorbachev)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이후 경제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개방이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보의 공개뿐 아니라 문제를 토의하고 적극적 새로운 思考를 수렴한다는 뜻이다. 이같이 경제 개혁을 정치적 민주화와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페레스트로이카」인데 경제적 측면에서 이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회주의의 잠재력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러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 하여서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의 모든 개혁은 자본주의의 승리 또는 자본주의에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서방세계에서 말하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위기 또는 서방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목적에서 과거 전통적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를 수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Ⅲ. 北韓의 經濟體制

2차대전 이후 북한은 소련점령과 함께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여 왔다. 먼저 1946년부터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토지의 무상 몰수와 무상 분배, 각종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의 집단화와 국유화 과정은 1930년대 초 스탈린이 시행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11) 고르바초프(하용철 옮김), 1988, p. 33.

승리)까지 과도기로서 먼저 1958년 8월까지 농업집단화를 완성시키며 그리고 주요 산업뿐 아니라 中小商工業까지 사회주의 경제형태로 改造하여 완전히 國營 내지 協同經營體制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경제는 고전적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政策路線과 같은 정책을 오늘날까지 수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북한사회의 유일한 지도이념인 「主體思想」에 근본을 둔 經濟에서 自立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自力更生の 原則에 따라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생산수단을 자체 조달한다는 이유와 또한 國防에서 自衛를 위한 군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공업 우선 정책을 또 다른 하나의 경제기본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 양식에 있어서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을 취하여 왔다. 외연적 성장방식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정치적 합목적성을 경제적 합리성 보다 우선하여 黨性과 革命性을 강조하면서 의욕적인 생산요소의 양적 동원을 시키는 방식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바로 불세비키 혁명노선으로서 소수 정예의 직업적 혁명가에 의한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을 결속, 지도한다는 엘리트주의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黨指導部の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지도부의 가치관이 경제정책 형성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하는 政經一致를 내세우는 古典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계획에서 黨의 절대적 위치를 찾아볼 수 있는데 「國家計劃委員會」가 경제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 집행사항을 道, 市, 郡, 企業所에 이르기까지 一元化 체제로 감독을 하는데, 이 계획 위원회는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政經一致에 따른 경제운용의 기본명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市場에 의존하는 것보다 黨政策을 계획에 반영, 집행하므로써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黨의 支配 없이는 사회주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黨의 궁극적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 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통일국가 형성을 위해서 그 기반을 조성

하며 이것은 물질적 자극 보다는 정치적 동원¹²⁾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같이 북한 경제는 폐쇄적인 중앙집권 계획경제이다. 自力更生原則을 기본으로 하여 폐쇄경제를 유지해 오던 북한이 1970년대 후기부터 경제의 해외부문을 강조하면서 수출확대책을 마련하고 경제기술 관료의 대거 기용, 서방자본과 기술을 직접 도입할 수 있는 「合營法」 제정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뒤에 나타나듯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對內的으로는 체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中長期 經濟計劃에 차질이 60년대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하였다. 60년대 이전에는 경제의 후진성으로 動員的인 경제계획에 의하여 계획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의 발전과 함께 중앙집권적 계획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폐쇄정책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과 자본 없이 양적 동원만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점에 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60년대 이전까지는 中·蘇 그리고 東歐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계획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60년대부터는 中·蘇 理念分爭이 발생한 이후로 경제원조에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것은 양국의 원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원조무기화 정책으로 쓰라린 경험을 받았다. 그리하여 경제적 지원을 서방경제협력 도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6個年 計劃(1971~1977)에 있어서 무리한 경제계획 목표설정으로 무역수입 증대에 따른 外債累増과 1975년 이후 표면화 된 延滯金累増으로 국제신용 실추에 따른 西方諸國으로부터 경제협력 도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東歐뿐만 아니라 中國에서도 1978년 이후 實用主義를 내세워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받아 정책

12) 예를 들면 千里馬運動, 千里馬作業班運動, 3大革命 붉은기 쟁취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운동 등이다.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정책전환은 개방적 분권시장 경제로의 移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의 東歐에서 시작한 경제개혁이나 최근 중국에서 그리고 소련에서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비교해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을 보면 북한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의 國公有化로 민간부분에 의한 시장기능 활성화란 있을 수 없고 다만 국영기업소의 單位에서 일찌기 「獨立採算制」를 도입하였다. 이 「獨立採算制」는 중앙집권적인 것을 分權化하는 경영형태이지만 결국 국가경제계획의 一元化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70年代 이것이 소개되었던 이유는 국가재산의 관리소홀과 노동기피 현상을 제거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자는 뜻이었다. 이 제도가 기업측면에서 보면 물자구입과 판매에 다소 융통성을 부여하여 독자적 손익계산서에서 남는 잉여금으로 기업소 개선 내지 종업원 후생복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소 動機誘因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통제적 측면은 대단히 엄격하다. 이 제도를 1980년에는 소규모의 전국 지방산업에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984년에는 사무기관을 제외한 非生産部門의 기관, 예를들어 예술단, 공연단체에서도 「완전독립채산제」 또는 「半독립채산제」가 실시되고 있다.¹³⁾

對外開放化를 보면 70년대 후반 對西方延滯金の 누증에 따라 과거 소극적 무역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증진 정책으로 전향을 시도하였다. 1980년에는 수출확대책을 마련하는 등 對西方과 무역증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협력이 대내 경제발전과 人民生活向上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對外關係에서 경제를 정치에 우선하도록 전환시키면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未修交國과 상호 이익 원칙아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 결과 나타난 것이 1984년의 「合營法」인 것이다.

13)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p. 161.

국내정치의 개혁과 보수파 제거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東歐 및 최근 中·蘇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점에서 북한에는 경제개혁이나 정책전환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金日成이 40여년 이상 집권하여 왔으며, 그리고 다음으로 金正日에 권력을 이양한다는 사실은 북한 국내 정치에서 1人獨裁體制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이며, 이것의 의미는 바로 경제개혁에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미미하나마 다소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조치적인 지엽적인 것이며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의 수정을 뜻하는 경제개혁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 고전형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의 수정을 뜻하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화와 계획화는 본질적으로 두되 시장기능과 가격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IV. 北韓經濟의 展望

社會主義國家에서 경제개혁과 개방은 경제적 위기 다음에 대두되고 그리고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국가는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경제개혁의 성공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지도자와 그리고 개혁에 대해 반발을 하는 국내 보수파 내지 강경파를 제거 내지 약화시키는데 달렸다고 했다.

북한경제가 70년대 후반 이후 경제발전이 침체되어 왔고, 이제는 과거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북한이 취하여 온 정책노선을 고수하는 데는 한계점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개혁과 개방의 적극적 추진이 경제의 후진성 내지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우선인 북한사회에서 경제개혁을 통한 합리성 추구하고 개방에 따른 주인의식의 국제화로 인해 혁명적

사상에 해이감을 가져 온다는 점이 북한이 당면한 딜레마이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이란 사회주의 건설, 남조선 해방 그리고 세계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며,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경제문제가므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본질적 체제수정이란 생각할 수 없다. 정치적 합목적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집권당인 노동당 더 나아가서 金日成의 정치집권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경제개혁과 개방이란 정치권력의 분권화를 유발하며 이것은 곧 통치권에 위협이므로 金日成이 계속 집권하는 한 東歐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개혁과 개방이 없다. 따라서 경제개혁과 개방이 적극적이지 못한 한에서 경제전망은 밝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 사회 내부에는 정치적이고 행동지향적인 강경주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實用主義의이고 기술·전문 지식을 가진 온건주의자들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혁명성과 당성을 강조하는 강경파와 합리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온건파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다소 사정을 달리 하겠지만 一人獨裁의 장기집권이 유지되는 한 희망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국토통일원, 「北韓概要」.
2. 金泰弘, 「中華人民共和國의 經濟改革과 產業成長」, 韓經新書 10, 1987.
3. 코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하용철 옮김), 사계절 新書, 1988.
4. Kornai, Janos, "The Hungarian Reform Process: Vision, Hopes, and Real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AEA, Vol. XXIV (Dec. 1986), pp. 1687~1737.
5. Lange, Oscar,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Review of Economic Studies*, Oct. 1936 & Feb. 1937, pp. 53~71, pp. 123~142.
6. Wiatr, Jerzy J.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s in Socialist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社會科學과 政策研究」, 제 9 권, 제 2 호(1987. 1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7. Gumpel, Werner, "The Change of Economic System in the Socialist Coun-

tries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Causes for Changes and the Political Effects of Reforms," 東西研究, 제15권 No.1 (1986),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소.

8. Zhang Wenwu & Ni Xiaoquan, "China and Asi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oviet Union, China & Northeast Asi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st Studies, July 26~28, 1988.